

# 실현되지 못한 귀환 : 1945-50 소련의 사할린한인 귀환 문제의 검토

방 일권(한국외대)

## I. 들어가며

국내에서 사할린한인사 연구가 학술 자료라는 결과물로 나타나기 시작된 시기는 1970년대 초기까지 올라간다.<sup>2)</sup> 그럼에도 한인사의 주요 시기나 사건과 관련된 기본적인 의문들은 여전히 역사적 엄밀함으로 규명되지 못한 상태이다. 남사할린을 차지한 소련은 얼마나 되는 한인을 억류시켰는가? 소련 치하 초기에 한인은 어떻게 통제 혹은 관리되었는가? 한인 억류에 깔린 소련의 계산은 무엇이었고 사할린한인을 귀환시키려는 의도를 갖고는 있었는가?

1970년대 초에 일부 한인들을 귀환시키려는 시도와 관련하여 소련이 ‘억류’에서 귀환의 허용으로 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며 이후 1980년대 후반까지 귀환 문제가 진척을 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의문 역시 위 질문들과 연결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더 알려져 있는 한인 귀환 협상 과정이 1990년대 이후에 급물살을 탄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도 이상의 질문에 대한 해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한인 억류의 초기 상황을 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에서뿐 아니라 한인의 귀환 문제는 국외 연구자들에게 있어서도 핵심적 주제이다. 사할린한인의 귀환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귀환을 위한 일본 내의 활동을 다룬 미시나 히데아키(三品英彬)<sup>3)</sup>나 ‘전쟁노동력으로 사할린으로 강제연행했던’ 한인 대부분을 ‘그대로 방치한 일본 정부’의 전후 법적 책임을 묻고 있는 오누마 야스아키(大沼保昭)<sup>4)</sup>와 같은 일본 측 자료들의 지적이 그 하나다. 러시아에서도 ‘일본인은 한인을 버렸다. 자기 국민만 데려갔다’고 한 복지고우<sup>5)</sup>를 필두로 저명한 한인 관련 기록 연구자 쿠진<sup>6)</sup>이나 사할린 한인 출신의 연구자 박승의<sup>7)</sup> 역시 우선적으로 일본의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사할린한인 미귀환의 책임에 대한 목소리가 그 톤까지 일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다수의 사료를 검토한 쿠진의 언급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국제법적 관점에서 귀환의 미실현에 대한 책임이 일본에 있음은 명백하다’고 하면서도 소련이 ‘다수 한인의 운명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 떠안지 않으면 안 되었다’며 소련을 옹호하고 있다.<sup>8)</sup>

내용으로 볼 때 쿠진이 주장하는 소련의 ‘역사적 책임’이란 한인으로 인해 부담을 안게 된 안보 및 물질적 지원의 문제를 의미하지만, ‘미국과 일본, 한국이 소련의 선의에 기대어 국제법에 상응하게 카라 후토 한인을 귀환시키는 것이 불가능했던 건 아니었다’는 주장을 보면 적극적인 ‘억류’의 책임을 부정하

2) 사할린한인사에 대한 국내 연구와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방일권, 「한국과 러시아의 사할린한인 연구-연구사의 검토」, 『동북아역사논총』 38호, 2012, 363-413쪽, 특히 370-387쪽의 ‘이주와 귀환문제’에 대한 검토를 참조.

3) 三品英彬, 『棄てられた四万三千人: 樺太朝鮮人の長く苦しい歸還の道』, 三一書房, 1981.

4) 大沼保昭, 『サハリン棄民: 戦後責任の点景』, 中央公論社, 1992.

5) *Бок Зи Коу*. *Корейцы на Сахалине*. Южно-Сахалинск, 1993, с. 102.

6) *Кузин А.Т.* *Исторические судьб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Монография. В трех книгах. К. 2. Интеграция и ассимиляция (1945-1990 г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здательство «Лукоморье», 2010. с. 72.

7) *Пак Сын Ы*. *Проблемы репатри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Материалы региональной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27-28 марта 2007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здательство Лукоморье, 2008. С. 277-287; *Он же*. *Репатри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родину: история и проблемы // Режим доступа: <http://www.dvd-sakhalin.ru/?pg=2&type=2&page=0>*

8) *Кузин А.Т.* *Проблемы послевоенной репатриации японского 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а // Россия и АТР*. 2010. № 2. С. 76-83.

는 입장에 있음을 알 수 있다.<sup>9)</sup> 물론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상황에서 한인 억류의 책임을 소련 측에 떠넘기려는 입장을 견지해 온 일본에 대한 반박이었으나 우리 입장에서 쿠진의 이러한 주장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확인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최근 러시아에서는 귀환에 관한 두드러진 연구들이 나왔다. 첫째는 1940년대 후반 이래 남사할린 거주 일본인의 귀환 문제에 관한 연구 다룬 뵈드페츠니코프와 소장학자 김의 연구이다. 이들의 연구는 사할린한인 귀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으나 일본인의 귀환 문제에 대한 논의 및 결정 과정에 대한 세밀한 추적을 통해 당시 한인 귀환 문제에 대한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두 연구자의 성과는 귀환 문제를 결정하는데 영향력을 가졌던 세 주체(군과 중앙 및 지방당국)의 상호 접촉의 과정을 보여줄 뿐 아니라 민간인의 귀환 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자주 천명했던 인물로 등장하는 남사할린 주(州) 초대 민정국장 Д.Н. 크류코프(Крюков)의 주장을 통해 한인의 운명이 그의 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음을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sup>10)</sup>

두 번째로 사할린한인 귀환 문제를 본격적으로 언급한 러시아 연구자 진의 최근 성과가 있다.<sup>11)</sup> 진은 사할린과 모스크바에 소재한 주요 관련 사료들에 기초해 군과 중앙 및 지방당국 간의 논의 및 일본 민간인의 철수 문제와 사할린한인의 귀환을 연결해 검토하면서 소련이 사할린한인을 북한으로 귀환시키려는 계획을 구체화했음을 러시아 사학계에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사할린한인의 북한 귀환 계획은 이미 1993년에 국내에 알려졌고 이를 활용한 한혜인과 황선익의 논문도 나와 있다. 한혜인은 사할린 귀환 문제를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추적하면서 한일, 소련 및 북한의 정책과 논리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소련의 입장에 대해서는 일본인 귀환으로 인한 노동력 손실을 염려해 한인노동자를 최대한 정주시키는 정책을 썼고 ‘국민’화를 꾀했다고 평가하였다.<sup>12)</sup> 사할린의 일본인 송환 문제에 대한 연합군총사령부와 소련 간 협의 과정과 국내 여론 등을 추적하며 사할린지역 한인 귀환교섭의 문제를 규명하고자 한 황선익은 사할린한인은 ‘해방국민’이라는 모호한 국적으로 인해 귀환의 주체도 교섭의 대상도 되지 못하였으며, ‘소련의 강력한 전후복구정책’, ‘해외 한인에 대한 모호한 국적규정’, ‘귀환부담을 지려하지 않는 소련의 대미교섭태도 등 말미암아’ 억류되었다고 보았다.<sup>13)</sup>

사할린한인의 귀환사 전반을 다룬다는 점에서 검토의 범주가 넓기는 하지만 최기영의 글 「한인의 사할린 강제 이주와 귀환」에서도 해방 직후 사할린한인이 귀환하지 못한 주요한 이유로서 노동력이 필요했던 소련 당국의 의도가 지적되고 있다. 즉 ‘여하한 수단을 쓰더라도 전쟁에서 잃은 노동력을 보충해야’ 했던 ‘소련 군정은 연합국과의 거류민 송환협정을 최대한 연기하고자 하였고’, 거류민에 대한 신분조사를 실시해 한인을 무국적자로 취급한 조치 역시 ‘결과적으로 사할린 거주 한인의 소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소련 당국의 의도였다’는 것이다.<sup>14)</sup>

9) *Кузин А.Т.* Исторические судьб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Монография. В трех книгах. К. 2. Интеграция и ассимиляция (1945-1990 г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здательство «Лукоморье», 2010. с. 72. 일본의 책임론을 보다 강조하는 입장이라는 하지만 러시아 측 자료를 주로 활용한 박승의와 한국학자인 박종효 역시 대체로 쿠진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Пак Чон Хё.*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и корейцы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 Уроки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Материалы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священной 65-летию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2 - 3 сентября 201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2011. С. 60.

10) *Подпечников В.Л.* О репатриации япон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с территории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 Вестник Сахалинского музея. Южно-Сахалинск. 2003. № 10. С. 257-260; *Ким И.П.* Репатриация японцев с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в послевоенные годы // Вестник Росси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м. И. Канта. 2009. Вып. 12. С. 26-30.

11) *Дин Ю.И.* Проблема репатриации корейцев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в 1945-1950 гг. // *Вопросы истории.* Вып. 8. - М., 2013, С.72-81.

12) 한혜인(2011), 「사할린한인 귀환을 둘러싼 배제와 포섭의 정치-해방 후~1970년대 중반까지의 사할린한인 귀환 움직임의 중심으로」, 『사학연구』 102, 177면. 1945-50년 시기와 관련하여 한혜인은 국내 언론에 보도된 신문 기사를 사료로 활용하였으나 그 해석의 문제가 있고, 시기별 차이점을 구분하지 않고 귀환의 문제를 다루었다.

13) 황선익(2012), 「사할린지역 한인 귀환교섭과 억류」,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3집, 447, 449면.

14) 최기영, 「한인의 사할린 강제 이주와 귀환」, 장석홍외, 『해방 전후 국제정세와 한인의 귀환』, 역사공간, 2012, 88-89면. 물론 저자는 ‘기본적으로 사할린에 거주하던 한인들이 졸지에 소련에 억류되어 미귀환자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 자국에 대한 유불리를 따져 한인의 국적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했던 ‘일본 정부의 무책임에서 비롯된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같은 글, 90면).

역사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관련 연구들에서 러시아 측의 사료들은 엄밀한 분석의 대상이 되지 못한 채 한인의 ‘억류’가 소련의 의도 가운데 추진되었으며, 그 ‘억류’의 주요 동인은 역시 노동력 활용의 문제로 귀착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결론은 역사적 검토 과정에 대한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근본적인 의문들을 불러온다. 1차적으로는 한인 노동력 확보에 동반될 ‘억류’라는 국제적 비난의 부담을 수련 당국자들은 검토하지 않았는가이고, 다음으로는 ‘억류’의 비난을 상쇄할만한 한인 노동력의 잠재력 평가자료 및 이에 기초한 ‘억류’의 결정 시기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글은 1945년 8월 이후 1950년 한국동란 이전까지의 기간을 중심으로 남사할린 한인의 귀환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들을 해명해보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이제까지 제시된 구체적인 질문들을 기초로 소련의 사할린한인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들과 1940년대 후반 사할린한인의 귀환과 노동력 문제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여러 연구들에서 언급된바와 같이 노동력 활용의 의도에서 한인 억류가 결정된 것임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소련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버려진 한인들을 대상으로 소련식의 노동 관리 및 감독에 나서는지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부가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는데 활용하고자 하는 몇 가지 주요 사료의 소개도 필요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남사할린 초대 민정국장이었던 크류코프의 회고<sup>15)</sup>가 출판되어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처음 활용되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개인의 주관적인 입장을 변호하고자 하는 내용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공식 사료들과 비교할 때 의미 있는 기록이 될 수 있다.

둘째로는 러시아연방국립기록보존소(ГАРФ)의 기록군(Фонд) 5446(소련각료회의 결정사항)과 9401(내무부), 9526(소련각료회의 부속 송환업무국)의 일본인 귀환 관계자료들이다.<sup>16)</sup> 이들 1차 사료군을 검토하는 가운데 두 가지 사실이 확인되었다. 첫째는 1946년부터 48년 시기까지 귀환 업무의 총괄은 소련 각료회의(Совет министров) 즉 중앙당국의 소관이었으나 사실상 송환업무국은 군 출신자들이 주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한인의 귀환 문제는 별도의 단위업무로 분류된 적이 없고 일본인 귀환 업무의 일부로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셋째는 사할린주국립역사기록보존소(ГИАСО)에 보존되어 있는 한인 관련 사할린 주당국의 행정문서들로 폰트 번호 53(사할린주 인민대표회의)와 171(민정국) 자료들이 중요하다.<sup>17)</sup> 한국의 국가기록원 역시 한인 관련 기록으로 동 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사할린 관련 기록들을 가지고 있다.

## II. 사할린한인 귀환 문제의 제기 배경

1946년 12월 19일 미국과 소련이 ‘소련 점령지구 송환에 관한 미소협정’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모든 일본인 전쟁 포로와 더불어 ‘각자의 희망에 따라’ 일반 일본인의 귀환이 가능해졌다.<sup>18)</sup> 하지만 사할린의 경우 민간인이 절대 다수인 일본인이 귀환 대상이었다는 점 자체가 한인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

일본의 패전 이후 미국과 소련이 지역의 재편과 전후처리를 주도했던 시기는 2차 대전의 승리를 위해

15) *Крюков Д.Н.* Граждан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на Южном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в 1945 - 1948 гг. // Краеведческий бюллетень, 1993. № 1. С. 3-44.

16) ГАРФ(GARF: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 5446[Постановления Совета министров СССР]의 각 시리즈(Опись)는 시기(연도)별로 구분되어 있고, Ф. 9526[Фонд управления Уполномоченного Совета министров СССР по делам репатриации]는 주로 전쟁포로의 송환 관련 자료가 주를 이루며 민간인의 경우는 일본인 귀환 자료가 대부분이다. 이 자리를 빌어 자신이 모스크바에서 찾은 기록들을 기꺼이 제공하고 연구에 활용하도록 허락해 준 러시아 연구자인 진올랴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들 기록군에 속한 자료의 일부는 한국의 국가기록원에도 소장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기록물 정리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일반인의 활용은 어려운 상태이다.

17) ГИАСО(GIASO: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архи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Ф. 53: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совет народных депутатов; Ф. 171: Управления по гражданским делам.

18) 미소 양측의 협의 과정과 입장에 대해서는 황선익(2012), 「사할린지역 한인 귀환교섭과 억류」,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3집, 431-461면을 참조.

협력하던 양 측의 협력 구도가 와해되면서 결별하는 과정이자 서로를 견제하면서 경계를 확정하는 과정이었다. ‘소련 점령지구 송환에 관한 미소협정’의 협의 시기에 미소는 일본의 분할 문제<sup>19)</sup>로부터 포로의 송환과 그에 따른 비용 문제, 패전국의 연합국에 대한 배상 문제 등 다양한 사안에서 자주 대립하며 냉전을 행해 나아가고 있었다.

국제 관계와 정세의 변화가 일본인 민간인 귀환 결정의 원(遠)배경이라면 군 병력의 귀환에 주요한 목적을 둔 포츠담 선언은 미소간 귀환 협의 진행의 보다 가깝고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따라서 미소간의 협상은 기본적으로 ‘포츠담 선언에 따른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본국 송환의 이행’에 초점을 두고 있었기에 협상 과정에서 민간인의 송환은 부차적인 관심사였다.<sup>20)</sup>

해방국민으로서 패전한 일본인들보다 먼저 귀국하게 되리라고 예상했던 약 3만 명의 사할린 잔류 한인<sup>21)</sup>사회에 일본인의 송환 결정 소식은 심리적으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많은 증언에서 언급되듯, 한인들은 코르사코프 항구에서 상당 기간 동안 귀환을 기다리다 못해 집으로 돌아온 경우라도 보따리를 풀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있었다. 1945년 겨울과 1946년 초에 일부 한인들은 개별적으로 귀환을 요청하는 청원과 편지를 지방과 중앙에 과감하게 발송했고 임시직 노동 현장에 머물며 하루하루 버티는 이들을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관심을 귀향에 집중하고 있었다.<sup>22)</sup>

일본인들의 송환만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한인들은 ‘작업장으로의 복귀를 거부하거나 보다 적극적으로 귀환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하는’ 등 집단적 의사 표현에 나서 지방 당국을 긴장시켰다.<sup>23)</sup> 소련군 극동군사령관부에 했던 직접적인 의사 표현으로 소련군 관계자들 스스로 ‘일본인들의 귀환을 본 한인들은’ 귀환 문제의 결정이 ‘지체되는 것을 매우 고통스럽게 인식하고 있다’<sup>24)</sup>고 인정했다. 한인 김정연이 스탈린에게 청원한 1947년 4월 23일자 작성 편지에는 ‘한인의 귀환이 올해에는 가능하겠는가’를 직접적으로 묻고 있다.<sup>25)</sup> 소련의 모든 정책 결정 통로에 대해 자신들의 귀환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소련은 이로써 사할린한인의 존재와 이들에 대한 귀환 문제를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임을 최고지도부 선까지 인식하게 된다. 1947년 6월 19일에 외무장관 В.М. 몰로토프(Молотов)가 이 문제를 검토하면

19) 유럽의 2차대전 도발국가들이 예외없이 분단의 징벌을 받았다.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분할된 대표적 예이다. 이탈리아도 작은 지역이나 잠시 분할된 경험이 있었지만 이를 회복한 것은 1943년에 무솔리니를 내쫓고 연합국과 휴전한 덕분이었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분할도 피하기 어려워 보였는데 실제로 스탈린은 일본의 분할점령을 끈질기게 요구했고, 본토의 분할 점령이 허용될 수 없다면 홋카이도 만이라도 분할점령하자고 제의했고 1945년 8월 중에는 ‘쿠시로와 모로이를 잇는 선 이북의 홋카이도를 소련이 점령하는 외에 도쿄에 소련군 주둔 지역을 제공하도록 맥아더 사령부에 요구하라’는 명령이 소련 자료에서 확인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트루먼의 거부로 실행되지 못했다. 한겨레 1995.1.5 기사: 스탈린, 도쿄 분할 점령 한때 시도.

20) 인도주의에 관한 국제법의 기초로 여겨지는 제네바 협약에서도 전시의 민간인 보호 문제는 1949년 제 4차 협약에서 채택되었다. 이는 1907년의 헤이그 협약 제4항을 개선한 것이었다. 전장에서 군대 부상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네바 협약이 1864년 처음 체결되었고, 전쟁 포로의 대우에 대한 제네바 협약은 1929년(제 2차)에 채택되었다는 사실과 비교할 때 민간인 보호 문제는 사실상 가장 늦게 관심을 받은 셈이다. 황선익에 따르면 포로를 중심으로 한다는 송환 협의의 기본 원칙은, 사할린한인이 38선 이남 출신 한국인이나 ‘사할린에 일본군이 아닌 노동자로 갔다는 점’을 들어 연합군총사령부 측이 귀환 교섭을 가로막은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황선익, 443, 446면.

21) 사할린한인의 수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으며, 소련측 공문서 기록에서도 약 5만명에서 2만 3천여명에 이르는 여러 수치들이 제시된다. 필자는 1947년 12월 17일에 사할린주당위원회가 작성한 “사할린 주 거주 한인 주민에 대한 대중 정치 사업 조직 관련 조치들에 관하여”에 나타난 ‘28,000명 이상을 헤아리는 주의 한인 주민’이라는 언급에 주목하여 약 3만 명으로 표기하였다. ГИАСО, Ф. 4, Оп. 1, Д.302, Л.28.

22) 일례로 사할린 민정국장 크류코프는 당시 소련 인민위원회 부의장 А.И. 미코얀(Микоян)에게 보낸 보고 자료에서 한인과 일본인 등으로부터 오는 개별적인 귀환 청원 요청과 문의에 대해 어떤 답을 주어야 할 것인지 공식적인 답변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ГИАСО, Ф. 171, Оп. 1, Д. 5, Л. 41.(문서의 작성 시기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첨부된 시기 기록 등에 의거할 때 1946년 1월경으로 판단된다.

23) ГИАСО, Ф. 171, Оп. 3, Д. 7, Л. 122.

24) ГАРФ, Ф.Р-9526. Оп. 4, Д. 54, Л. 416. - 극동군사령관부 국장 라스포핀(Распопин) 대령의 보고(1947년). Дин Ю.И. Проблема репатриации корейцев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в 1945-1950 гг. // *Вопросы истории*. Вып. 8. - М., 2013, С. 76 참조.

25) 김정연의 청원은 당시 소련 외무부의 책임자 В.М. 몰로토프(Молотов)에게 전달되어 모스크바의 수녀부에서 그해 10월 초에 논의가 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김정연 뿐 아니라 ‘몇몇의 한인은 몇 차례에 걸쳐 지역 당국과 군관계자들에게 꼬레야(Корея-조선)으로의 귀환을 요청하고’ 있었다. Дин Ю.И.(2013), С. 76 참조.

서 23,298명으로 집계된 남사할린 “한인의 귀환에 대해서는 어느 측도 누구에게도 구체적 지침을 내린 바가 없다”며 1946년 12월 19일의 ‘소련 점령지구 송환에 관한 미소협정’상의 합의 사항을 확인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였다.<sup>26)</sup>

두 번째로 일본인 송환 방식과 절차는 이미 미소간의 전후 처리에 대한 결정의 과정에서 확정된 것이 라 하더라도 일본인의 귀환 이후 상황과 관련해 귀환 업무를 직접 주관하는 당국자들의 인식이 이후 한인 에 대한 결정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1947년부터 실행된 일본인 귀환의 주 요 과정과 해당 업무 실무 참여자들의 견해와 주장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소간 협정에 따른 남사할린으로부터 일본인 송환 문제는 소련 각료회의(Совет Министров)에서 구 체적인 실무 지침들이 결정되었고, 그 구체적인 실행은 민정국 책임자인 Д.Н. 크류코프(Крюков)에게 맡 겨졌다.<sup>27)</sup> 이에 따르면 결빙기인 12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8개월 동안 매달 3만 명씩의 일본인 을 귀환항구로 지정된 마오카<sup>28)</sup>에서 홋카이도(北海道)로 송환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귀환 대상자의 임시 거주를 위한 시설은 마오카 항에 위치하는 379호 수용소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1947년 4월 20일에 이루어진 첫 송환을 통해 귀환한 일본인은 24,307명이었고, 1949년 7월 22일 까지 2년이 넘게 추진된 송환을 통해 돌아간 일본인 민간인의 총수는 272,335명이다.<sup>29)</sup> 물론 미소간 협의 에서 귀환 해당자를 ‘귀환을 희망하는 일반 일본인’으로 한정했고, ‘예측되지 않는 정세의 변화에 의해 ... 귀환자 수를 변경할 권한’을 협정체결 대표에게 부여한 면에서 이해할 수 있으나 관련 자료들은 사할린으 로부터 일본인의 귀환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계획에 비해 송환의 속도가 늦어졌음이 자료에서 확인된다. 1946년 초에 사할린 민정국이 파악 한 바에 따르면 당시 일본인 민간인은 281,653명이었다. 일본인 귀환자 총수와 비교하면 거의 모두 귀환 한 셈이지만, 소련의 송환 계획에 의하면 1947년에만 전체에 91%에 해당하는 256,968명을 귀환시키도록 되어 있었고, 1948년에 16,213명을 귀환시켜 사실상 사업을 종결시킬 예정<sup>30)</sup>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1947년에 사할린을 떠난 일본인은 160,701명에 그쳤을 뿐 아니라<sup>31)</sup>, 송환은 1949년 상반기까지 계 속되었다.

일본 민간인 본국 송환 업무가 계획보다 많이 지연된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1946년부터 47년 사이에 모스크바로 발송된 소련군 관계자들의 보고들은 이에 대한 명확한 힌트를 제공한다. 이들의 자료에는 남 사할린 민정국장 크류코프(사할린주 당 제1서기 Д.Н. 멜닉(Мельник)의 이름도 종종 언급된다.)가 ‘반드 시 매달 3만 명의 일본인을 379호 수용소로 보내야 한다’는 표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 사 할린 주당을 지칭하면서 ‘송환 계획의 실패 책임’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 것이다.<sup>32)</sup>

민정 업무 책임자들이 매달 3만 명의 일본 민간인을 수용소로 결집시켜야 하는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26) ГАРФ, Ф.Р-9526. Оп. 1, Д. 509, Л. 170.

27) 이하 일본인 귀환에 관한 소련측의 결정과 그 실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김 И.П. Политическое,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и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территорий, присоединенных к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Восточная Пруссия, Южный Сахалин,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1945 – первая половина 1949 года. Диссертация на соискание ученой степени кандидат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Южно-Сахалинск, 2010을 주로 참조하였다.

28) 1946년 6월 5일자로 소련은 일본 시대의 주요 항구인 마오카(真岡)를 홈스크(Холмск)로 개칭하기로 했으나 미소협정에는 ‘마오카(Маока)’로 표기되었다.

29) 김 И.П. Репатриация японцев с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в послевоенные годы // Вестник Российск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университета им. И. Канта. 2009. Вып. 12. С. 26-30. 일본인 민간인 이외에도 같은 기간에 일본군 포로 8,303명이 사할린에서 일본으로 돌아갔다.

30) 통계 수치는 자료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가진다. 가령 1946년 8월 사할린 민정국이 각 지역을 돌며 조사한 결과로서 민족별 통계까지 달려있는 ГИАСО, Ф. 171, Оп. 3, Д. 6, ЛЛ. 45-53에 따르면 일본인은 251,458명이다. 본 글에서는 김 И.П. Политическое,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и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2010), С. 69에서 제시된 수치를 따랐다.

31) 1947년 11월 17-18일로 기재된 사할린 주당국의 보고서를 보면 1948년 귀환 예정인 일본인의 수가 112,480명으로 나와 있다(ГАРФ, Ф.Р-9526. Оп. 5, Д. 53, Л. 14.). 1947년 6월 10일까지 돌아간 일본인 민간인의 수가 77,076명임을 감안할 때 1947년 하반기에 돌아간 이는 83,625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송환자 수는 사업이 진행될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32) ГАРФ, Ф.Р-9526. Оп. 1, Д. 510, Л. 54.

는 군 관계자들의 지적에 대하여 크류코프는 몇 가지로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고 있다.

먼저 그는 수송 및 기후 사정이 귀환업무 진행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1947년의 경우는 업무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원거리 거주자인 우글레고르스크 및 레소고르스크 등지의 일본인부터 귀환시키는 점이 어려움으로 작용했다고 이유를 들었다.<sup>33)</sup> 두 번째로는 일본인 스스로가 귀환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개인적으로 귀환을 미루어야 하는 이유들도 있으나 일본으로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귀환하는 상황에서 당장에 일자리가 없을 것이라는 염려가 사할린에서 일본인들이 귀환을 주저하는 더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sup>34)</sup>

세 번째 이유로 민정국장은 일본인 송환 대상의 순위 문제를 지적했다. 즉, 1947년에 송환될 제 1순위는 일본인 관리(공무원)와 사업 등 시설의 관리자, 지식인과 군인 및 그 가족이며, 그 다음 2순위는 일본인 노동자와 농민으로 이들은 1948년이나 귀환이 가능하고, 마지막 순위는 의사, 교사, 엔지니어 및 기타 기술자(가령 철도 업무 종사자 등) 기간 시설과 관련된 이들인바, 각 순위에 속하는 귀환 대상자를 매달 3만 명씩 모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sup>35)</sup>

사할린 대민업무 최고책임자의 주장이 얼마나 사실과 부합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일본인 귀환에 대한 실무업무 담당자의 부정적 판단이다. 실제로 크류코프는 일본인들을 지정된 수용소로 집결시켜야 했던 1947년 초에도 군으로부터의 협조 요청에 대해 무시하거나 연락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등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행정 절차적 핑계를 대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견지했다.<sup>36)</sup> 계급상 상급자인 극동군 사령관 알렉산드로프(Александров)의 압박조차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sup>37)</sup>

사할린 민정국장의 그 같은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 앞서 언급된 그의 세 번째 이유는 이에 대한 힌트를 제공한다. 당장에 많은 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귀환 대상자인 노동자와 농민을 2순위로 지정한 이유와 관련해 크류코프는 새로 소련에 편입된 영토에서 산업 시설의 정상적 가동과 추수의 종료를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sup>38)</sup>했던 것이다. 기술인들을 최후의 귀환 대상으로 본다는 말은 그의 의중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모스크바로 보낸 문서에서도 사할린 민정국장은 ‘일인들을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생산 현장에서 빼내는 일은 정부의 농업과 공업 생산 계획의 불이행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밝히면서 민간인 송환자를 월 3만 명에서 1만 명으로 낮추는 귀환의 속도조절을 제안하고 나섰다.<sup>39)</sup>

크류코프의 불만은 분명해 보인다. 일본인 송환문제에서 사할린 지역의 생산과 노동력 부족 문제가 제대로 고려되지 못했으며, 이는 전후 처리가 우선적인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군이 민간인을 포함한 귀환 업무를 주도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민정국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극동군 장교(중령)로 근무하였던 크류코프가 이미 합의된 협정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며 저항하는 듯한 태도는 모스크바의 고위당국자들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갖지 않을 경우 태업으로 비치기에 충분한 행위였다. 사실 사할린 지역 노동력 확보를 위해 민간인을 잔류시키자는 그의 주장은 전후 소련이 새로 획득한 지역 국경 지역에서의 안보 우선정책에 반하는 것이었다. 즉 적성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외국인 거주자의 밀집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쟁으로 획득된 칼리닌그라드 주 및 사할린 주의 민간인은 각각의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소련의 기본 정책과 부합했다.<sup>40)</sup>

33) ГАРФ, Ф.Р-9526. Оп. 1, Д. 509, ЛЛ. 50, 111-112.

34) *Крюков Д.Н.* Граждан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на Южном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в 1945 - 1948 гг. // *Краеведческий бюллетень*, 1993. № 1. С. 26-27.

35) *Крюков Д.Н.* Граждан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на Южном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в 1945 - 1948 гг. // *Краеведческий бюллетень*, 1993. № 1. С. 26-27; *Ким И.П.* Репатриация японцев с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в послевоенные годы // *Вестник Росси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м. И. Канта*. 2009. Вып. 12. С. 27.

36) 크류코프는 ‘바로 내가 그 일을 해야 하는 당사자인지 몰랐다’거나 ‘내각(정부)로부터의 구체적인 지시가 없다’는 이유로 379호 수용소로 일본인들을 수용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기도 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ГАРФ, Ф.Р-9526. Оп. 1, Д. 510, Л. 24, 55; ГАРФ, Ф.Р-9526. Оп. 1, Д. 509, Л. 26 등.

37) *Дин Ю.И.*(2013), С. 75.

38) *Крюков Д.Н.* Граждан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на Южном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в 1945 - 1948 гг. // *Краеведческий бюллетень*, 1993. № 1. С. 26.

39) ГАРФ, Ф.Р-9526. Оп. 1, Д. 509, Л. 168 // *Дин Ю.И.*(2013), С. 75.

게다가 새로이 확보된 지역에 대한 경제발전 및 전후 복구 문제에 대해서도 군 관계자들은 즉각 반박하고 나섬으로써 크류코프를 무력화시키고자 하였다. 즉 극동군관구 관계자들은 일본인 민간인의 매월 송환자 규모를 줄이자는 크류코프의 제안에 대해 그 같은 규모로 '민간인 귀환자가 줄어들면 군인 포로 송환자 수를 월 2만 명에서 4만 명으로 늘려야 하는데... 그 같은 조치는 오히려 대단히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므로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sup>41)</sup> '민간인의 경우 노동자 1명에 대해 보통 2-3명의 부양자가 딸려 있음에 비하면 이미 조직된 노동력으로서 군 포로들이야말로 민간경제 노동에 있어서도 유익이 더 크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sup>42)</sup>

군의 날 선 비판은 모스크바의 최고당국자들에 대한 일종의 시위적인 성격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련은 종전 직후인 1945년 8월 23일, 국가방위위원회 결정 9898호에 의해 일본군포로 50만 명에 대한 전후복구 동원을 결정한 바 있었고, 1946년 4월에는 시베리아에 수용된 포로 5만 명을 중앙아시아로 이송하고, '소련령 내의 병약한 포로 2만 명을 북한 내의 건강한 포로 2만 2천명과 교환'한다는 명령을 내릴 만큼 구일본세력의 전후복구 동원에 적극적이었다.<sup>43)</sup>

노동력 부족을 이유로 내세운 사할린 민정당국의 저항은 이상과 같이 대내외적인 모든 면으로 불 때 근거가 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보여주듯 시간이 갈수록 일본 민간인 송환은 그 흐름이 약화되었으며, 그 주요한 원인으로 크류코프의 '태만'을 방임하는 듯한 소련 중앙 당국의 태도가 한 몫을 하고 있었다. 당국은 이 문제와 관련해 크류코프에 대해 단호한 시정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점차 동조적인 모습까지 보였다는 점에서 그 해명은 간과할 수 없는 과제가 된다.

표면적으로 민간 업무를 담당하는 당국자와 군 관계자 사이에 벌어진 사할린내 일본인 노동력을 둘러싼 논쟁은 일단 군의 승리로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류코프는 모스크바의 지도자들에 대해 일본인의 귀환이 사할린 주의 농업과 공업 경제에 심대한 해가 되고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지 않았다. '귀환은 어차피 완결될 터이지만 그때까지는 생산을 위한 인력이 필수불가결함'을 이해해 달라는 그의 주장에 민간 부문을 관장하는 고위지도자들이 동조하기도 하였다.<sup>44)</sup>

크류코프의 보고에 대한 모스크바 실력자들의 동의는 원칙적인 측면에 국한된 것일까? 이에 직접적인 대답이 될만한 구체적인 문헌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나, 적어도 사할린 민간인 노동력 유출에 대한 민정국장의 우려 섞인 주장이 소련 당국자들에게 호소력을 가질 수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유력한 정황 증거가 한 가지 있다. 바로 일본인 유출 현황과 러시아인의 유입 현황이 그것이다. 194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사할린에 도착한 러시아인 이민자는 4,010 가구였는데, 그 중 1,009 가구는 농업에 나머지 약 3/4는 모두 어업 분야에 종사자로 나타났다.<sup>45)</sup> 두 가지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 일본인 귀환자에 비해 이주자가 턱없이 모자랐다는 점이 그 첫째라면,<sup>46)</sup>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공업 분야는 이주민을 통해서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 보다 중요한 두 번째 의미이다.

크류코프는 군 관계자들과의 외면적 갈등을 피하면서도 두 명의 각료회의 최고직 정치가들로부터 자

40) 이는 김 И.П.의 학위논문 Политическое,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и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2010)을 통해 설득력 있게 주장되고 있다.

41) 소련 점령지구 송환에 관한 미소협정의 2조 2항에는 '소련방 귀환항으로부터 일본인 귀환자 수는 월 5만 명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42) ГАРФ, Ф.Р-9526. Оп. 1, Д. 509, Л. 168-169.

43) 황선익(2012), 445-446면.

44) 크류코프의 주장은 소련 각료회의 의장대리 Л.П. 베리야(Берия)와 대외교역부 장관 А.И. 미코얀(Микоян)에게 올린 보고(ГАРФ, Ф.Р-9526. Оп. 1, Д. 509, Л. 233) 및 1947년 말에 소련 각료회의 부의장이 된 А.Н. 코스이긴(Косыгин)에게 올린 보고(같은 곳 Д. 510, Л. 24)에 나타나며, 동 보고서 위에 각각 동감의 뜻을 표명해 두었다.

45) 김 И.П. Политическое,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и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2010), с. 69.

46) 1947년 하반기부터 1949년까지 이주기로 계획되어 있는 가구가 4,200 호 정도로 나타나지만 이입자와 이탈자간 격차를 메우기는 큰 차이가 있었다. 위 글, С. 76.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북한 지역으로부터의 노무자 모집이다. 소련 내각은 1947년 초에 극동지역 주요 어업 기지의 심각한 인력 부족 사태의 해소를 위해 3년 계약으로 2만 2천명의 북한 노무자를 모집하는데 합의하고 3월 21일 북한에 대해 노무자 모집을 요청했다. 그 중 사할린으로 유입된 이들은 1947년에 6,475명(노무자 5,083명과 가족 1,392명)을 시작으로 1949년까지 들어 온 노무자의 수는 노무자가 모두 20,891명, 그 가족이 5,174명이었다. 같은 기간에 귀환한 이는 모두 14,395명이었으므로 잔류자는 11,670명이 된다. ГИАСО, Ф. 53. Оп. 1, Д. 7, Л. 45~48 및 Д. 109, Л. 27.

신의 견해를 일정 정도 인정받아 ‘생산 현장에서 일본인들을 빼내지 않도록’ 하는데 성공했다.<sup>47)</sup> 전쟁으로 획득된 영토로의 이주 문제를 담당하던 각료회의 의장단을 비롯하여 모스크바의 최고위급 정치가들이 크류코프를 누르지 못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우연이라고 할 수 없다.

미소간 송환 협정에 의한 근거한 송환이었음에도 사할린의 일본인 귀환은 구체적 추진 과정에서 지역의 군 당국과 민정국의 견해 차이와 갈등 속에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사할린 내의 경제 사정 역시 애매한 입장을 취하던 중앙 당국과 마찬가지로 안개 속에서 뚜렷한 경제적 개선책이 없이 방치되고 있었다. 한인의 귀환 요구는 이러한 배경을 뒤로하고 있었던 것이다.

### III. 사할린한인 귀환 문제의 검토

#### 1) 사할린한인 귀환 문제의 부각

1946년 말부터 1949년 7월 22일까지 약 28만 명의 일본인이 사할린에서 일본으로 돌아왔다. 그 다음 검토 대상이 한인이 될 것임은 사할린한인만이 아니라 소련 당국자에게도 명확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해방 직후부터 한인들은 귀향 요구를 구체화했을 뿐 아니라 일본인의 귀환 과정에 몰래 끼어서 탈출 시도를 감행하는 일도 불사했다. 대표적으로 1947년 9월 28일에 포로나이스크에서는 ‘26명의 한인이 아무런 허가나 근거도 없이’ 일본 귀환을 위한 수용소행 교통편에 편승하려 시도하였다가 발각된 사례가 보고되었다.<sup>48)</sup>

사할린한인들은 해방 이후 소련 치하에서 이동의 제한과 엄중한 감시라는 부자유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당국자들이 일시적으로 귀환 문제에 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가능하였다. 하지만 문제를 계속 미룰 수 없는 상황들이 나타났다. 그 하나는 1946년 여름까지 드물지 않았던 훗카이도 방향로의 개인적 탈출의 시도와 관련되었다. 당시 라페루즈 해협에 대한 소련의 경비는 매우 취약했고, 일본 측의 해안 경비는 사실상 없는 상태였다. 심지어 1949년 8월까지도 사할린 지역 국경 경비단 관리부 담당자 구빈(Губин) 대령이 사할린주 내무관리들에게 보낸 비밀문서에서 인정했듯이, “국경 수비 강화라는 관심에 근거해 볼 때 남쿠릴 열도와 남사할린 연안, 즉 네벨스크, 아니바, 코르사코프 지역들에서 현재보다 더 철저한 국경 통제 조치를 취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쿠릴 지역 거주 한인들(986명)은 이를 이용하여 노골적으로 ‘이주의 기대를 드러내고 있었다.’<sup>49)</sup>

사할린에서 개인적으로 탈출한 한인들 중에 고향으로 돌아가 소련의 ‘비인도적 4만 동포 억류’를 비난하는 공식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소식은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1947년 9월 25일에 타스(TASS) 통신은 상하이에서 확인한 다음과 같은 소식을 전하고 있다.

서울발 소식에 따르면, 21세의 한 한국인이 가짜 문서로 러시아인을 속이고 사할린 섬을 탈출하는데 성공하여 밝히길, ‘러시아인들은 조선에 정부가 없다는 이유로 4만 명의 한인에 대한 귀환을 거부하고 있다. 사할린에 거주하는 95%의 한인들은 고국 귀환을 염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소비에트 군대 앞으로 보낸 모든 귀환 관련 청원은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 지역 신문이 보도했다.<sup>50)</sup>

타스가 타전한 서울 소식은 동년 9월 21일에 『자유신문』이 보도한 내용으로서 동 기사에 따르면 탈출한 21세의 한국인은 김재덕(金載德, 가명)이며, 그는 1947년 9월 10일 경 단신으로 귀국한 인물로

47) Дин Ю.И.(2013), С. 76.

48) ГИАСО, Ф.557, Оп.1, Д.4, Л. 36. 같은 곳에서는 동일한 사례가 홋카이도에서도 나타났음이 지적되고 있다.

49) ГИАСО, Ф. 4, Оп. 1, Д. 556, Л. 60. 구빈은 계속하여 ‘한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쿠릴 열도에 거주 중인 모든 모든 한인들을 사할린 섬 내의 작업장으로 옮기는 조치가 꼭 필요하다’(밑줄은 원문을 따름)고 강조하였다.

50) Дин Ю.И.(2013), С. 76-77에서 재인용.



소개되었다. 그런데 『자유신문』 기사의 후속 보도로 여겨지는 1947년 10월 29일자 『동아일보』의 기사에서 위의 김재덕과 동일인으로 여겨지는 인물의 이름은 최영기(崔永璣)로 나타나고 있다. 그가 사할린에서 일본인과 섞여 탈출하여 부산을 통해 상경한 후 군정장관 및 민정장관 등에게 사할린 동포의 실정을 알리며 이들의 구출을 위한 탄원서를 올리는 등의 활동을 소개한 『동아일보』는 『자유신문』과 배치되는 내용과 더불어 소련의 처사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비난을 덧붙였다.

‘생활사정은 대전 당시도 남화태라고 하면 비생산지대로서 생활에 커다란 지장이 있었는데 오늘에 있어서는 남북으로 양단되어 있는 만치 더욱 생활난이 막심하여 우선 식량과 의류부족으로 최저한도의 생활도 확보하기 어려운 사태인데 구조할 방법도 없이 이같은 상태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당지에 있는 4만 동포의 생명은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 것이다. ... 끝으로 소련측에서의 동포들을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먼저 조선인의 단체적 행동들을 불허하고 둘째로 조선인 교과서로서 조국의 지리와 역사를 엄금시킨다. ... 진보적 인민주의를 부르짖는 그들의 이같은 처지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sup>51)</sup>

기사의 후반부는 『자유신문』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전반부의 남사할린 한인의 생활사정에 대한 내용과 관련해서도 김재덕(가명)은 ‘생활문제에 있어서는 대체로 실업 문제는 없다 ... 그리고 아직 의식주에 있어서는 이력저력 마련되어 가는 모양이라 하며 체류 동포에 특수한 피해는 없는 모양이다’고 밝힌 바 있었다.<sup>52)</sup> 연구자 황선익이 암시하고 있듯이 이와 같은 보도는 1947년 11월에 결성된 사할린동포구출위원회(정식 명칭 樺太·千島在留同胞救出委員會) 결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sup>53)</sup> 탈출에 성공한 한 사할린한인의 발언은 이렇게하여 반소비에트 선전의 성격을 띠어 갔으며, 이러한 논조는 특히 『자유신문』에 의해 1949년 초까지도 계속되었다.<sup>54)</sup>

둘째로 일본인에 대한 미소간 귀환 협상의 과정에서 소련이 사할린한인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받고 있었으며 이는 한인문제에 대한 소련 지도부의 검토를 간과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었다. 이미 1945년 말에 ‘이중징용’으로 사할린에서 일본 규슈로 동원되어 야마이치(山一) 탄광 등에 남아 노동과 고향으로의 귀환도 거부한 채 사할린의 가족이 돌아오도록 조처해 달라고 청원했던 한인들을 통해 사할린에 다수의 한인 민간인이 남아 있음을 안 연합군총사령부(SACP)<sup>55)</sup>는 1946년 2월과 3월에 이들의 사할린 잔류 가족들의 귀환 의사를 소련 측에 타진하고자 시도하면서 사할린한인 중 조선 귀환을 희망하는 모든 이의 귀환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예비 서한을 작성하기도 하였다.<sup>56)</sup>

앞서 살펴본 김재덕 혹은 최영기 관련 보도가 이어지던 1947년 10월 16일 GHQ 장관대리 헬믹 대장은 기자단과의 정례 회견에서 ‘남화태와 만주지방에 잔류하고 있는 조선동포 귀환문제는 사정이 허락되는 한 최선을 다해 귀환하도록 하겠다’며 남사할린의 한인 귀환은 그곳이 소련 영토인 만큼 ‘국제적인 교섭이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사실을 미국무부에도 보고할 의향이 있음을 표명하였다.<sup>57)</sup> 곧이어 10월 26일에 사할린동포구출위원회가 맥아더 장군에게 보낸 ‘사할린 동포들의 출신 지역이 남한인 만큼 가능한 속히 남한으로 귀국하도록 힘써 달라’는 요청이 도착했고, 이에 대해 하지(John Hodge) 장군이 연합

51) 「극도의 생활난 징용으로 끌려간 재화태 4만동포」, 『동아일보』 1947년 10월 29일.(필자가 현대어 표기로 바꿈)

52) 「귀국할 길없는 화태잔류4만동포」, 『자유신문』 1947년 9월 21일(필자가 현대어 표기로 바꿈). 이같은 배치되는 언급으로 인해 김재덕이 최영기라는 새로운 발언자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본다.

53) 『자유신문』과 『동아일보』는 사할린동포구출위원회의 결성과 주요 활동을 동년 11월에 기사화했다. 이에 따르면 위원회는 맥아더 연합군사령관에게 진정서를 보내 일본 정부가 한인의 구출에 나서도록 건의하고 서재필을 통해 진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황선익(2012), 「사할린지역 한인 귀환교섭과 역류」,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3집, 449-452면 참조.

54) 황선익(2012), 451-453면을 참고할 것.

55)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56) 이에 대해서는 장석홍, 「사할린 지역 한인 귀환 : Repatriation of Koreans from Sakhalin, G-3 REPATRIATION 자료」, 『한국근현대사연구』 43집 (2007), 210-275면에 소개된 문서를 활용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별도의 문서에 대한 언급 없이 해당 자료가 제시된 지면만을 표기하기로 한다.

57) 「동포를 구할 길 열린다」, 『조선일보』, 1947년 10월 17일.

군총사령부측에 사할린한인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서 이 문제는 본격적인 검토 사안으로 부상했다.<sup>58)</sup>

하지만 1948년 2월 무렵에 사할린한인의 남한 귀환 요구는 주한미군정에 의해 부정적인 결론으로 정리되고 있었다. 주한미군정은 사할린한인의 귀환에 대해 ‘중전으로 남한으로 280만 명 이상의 한국인 귀환자와 망명자들이 귀국했다’며 ‘식량과 의복 및 수용소 제공을 위해 기존 시설이 무리하게 사용되어 온 상황’인바 ‘현 시점에서 연합군총사령부가 추가적으로 수천 명에 이르는 사할린과 쿠릴 열도로부터의 귀환자에 대한 의무를 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sup>59)</sup>

미국 측의 판단은 비단 남한의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표면적 이유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연합군사령부는 1947년 11월 22일에 작성된 문서에서 보다 상세하게 이유들을 제시했다. 즉 포츠담 선언이나 일본의 소련에 대한 항복 문서에서도 일본인 이외에는 그 누구도 귀환시킬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만큼 연합군 사령부가 그 의무를 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였다. 이어서 ‘인도적 관점’에서도 가라후토(樺太)의 사례는 중국이나 만주 지역의 한인 이주자들까지 귀환시켜야 하는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할린한인을 귀환시키는 문제는 ‘스스로에게 대단히 심각한 의무를 지우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60)</sup>

그와 같이 이미 1947년 말에 반대를 내부 방침으로 사실상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합군사령부는 1948년 3월까지도 사할린한인의 수와 그들의 귀환 희망 여부에 대한 정보, 그리고 한인 귀환 문제에 대한 소련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었다고 하겠다.<sup>61)</sup> 그럼에도 1947년, 특히 그 후반기에는 사할린의 일본인 송환과 맞물려 한인의 귀환 문제가 국제적 교섭의 차원에서 이미 피할 수 없는 관심사로 대두되어 있었다.

## 2) 북한으로의 귀환 계획

사할린한인의 귀환 문제가 쟁점으로 대두되던 당시 소련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가? 사할린한인의 ‘억류’라는 표현에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 있으나 적어도 1947년이라는 시점에서는 바른 표현이 아니다. 소련은 한인들 역시 귀환이라는 방향에서 정책을 취해야 할 대상 민족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판단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하나가 1947년 5월 말에 외무부와 내무부 최고위 책임자들 사이를 오간 두 행정서신이다. 외무차관 Я.А.말릭(Малик)의 서명이 있는 1947년 5월 23일자 서신은 외무부 제1극동과에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내무부 및 국가안보부 부책임자들에게 발송된 비밀 서신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일본의 항복 시점 이래 남사할린 지역에는 22,777명의 조선인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 조선인들은 스탈린 동지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자신들의 조선(Корея) 귀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사할린에서 이들 한인들을 조선으로(в Корею) 귀환시키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sup>62)</sup>

기록은 적어도 1947년 초반에 한인의 귀환 문제가 소련 외무부내 관할 부서의 검토 사안이었을 뿐 아니라 관계 행정부서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확인시켜 준다.

한인들의 귀환지를 조선(Корея)으로 밝히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이 자료의 하단에는 “5월 29일 3008호로 말릭 동지에게 서신이 발송됨”이라는 타자 메모가 보이는데, 바로 뒷장에 붙어 있는 이 3008호 답변서의 작성자는 소련 내무장관 С. 크루글로프(Круглов)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58) 장석홍(2007), 236-238, 241면.

59) 관련 내용은 1948년 2월 24일에 작성되었다. 장석홍(2007), 243면; 황선익(2012), 452면.

60) 장석홍(2007), 252-253면.

61) 大沼保昭, 『サハリン棄民：戦後責任の点景』(中央公論社, 1992), 32; 한혜인(2011), 170면.

62) ГАРФ, Ф.Р-9401. Оп. 1, Д. 2864, Л. 355.

1947년 5월 23일자 .... 서신에서 언급하신 남사할린 거주 조선인 22,777명의 귀환 문제에 대하여 소련 내무부는 그들의 귀환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밝힙니다.

다만, 남사할린 내의 한인들이 다양한 소비에트 경제 조직들에서 노동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들의 귀환 문제는 소련국가계획위원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sup>63)</sup>

한인 전체(22,777명)의 귀환에 동의한다는 점을 내무장관이 이처럼 명확히 밝히고 있다는 사실은 내무부가 전쟁 이후 새로 획득된 영토에서도 대민행정의 총괄부서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물론 답신에는 한인의 귀환지에 대한 언급이 없고, 노동력으로서 한인의 이탈이 소련의 계획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들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내무부는 노동력에 대한 고려가 한인의 귀환을 반대할 정도의 핵심 요소는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부서간 내부적인 의견 수렴의 과정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한인 전체의 귀환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조건부로나마 들어 있어야 한다.

실제로 내무부가 한인의 귀환에 대해 호의적이었음을 추정케 하는 기록도 있다. 1946년 7월 17일에 내무장관 명의로 작성되어 소련 각료회의 의장대리 Л.П. 베리야(Берия)에게 발송된 공문을 보면 내무장관은 남사할린 내의 중국인과 한인들을 (소·일간의-저자) ‘전쟁 전에 남사할린과 쿠릴 열도로 일본인들에 의해 끌려 온 이들’로 인식하고 있었다.<sup>64)</sup> 따라서 “소련 내무부는 지역당국으로부터 고국으로 가고자 희망하는 한인과 중국인의 숫자에 대한 자료를 받기까지는 ... 이들의 한국 및 중국으로의 출발을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으나 ‘지역 당국으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한인 및 중국인들의 청원을 접수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sup>65)</sup> 강제동원된 한인 전체의 귀환이 당연함을 전제로 하는 의견이었던 것이다.

지역의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총괄부 최고위직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소련 당국에서는 이렇다 할 반대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들 역시 사할린한인의 귀환을 계획 중이었다. 이미 국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할린한인의 송환 계획이 그것이다.

1947년으로만 표기된 문서 생산 시점과 생산자로 스탈린의 이름이 명시된 ‘남사할린과 쿠릴 열도에서 북한으로의 한인 귀환에 관하여’(이하 ‘한인 귀환에 관하여’로 줄임)라는 명칭이 붙은 소연방 각료회의 기록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1. 소련 각료회의 송환문제 전권대표(골리코프 동지)에게 1948년 7월-10월 기간 중에 23,298명의 한인을 남사할린과 쿠릴 열도로부터 북한으로 귀환을 추진하도록 승인한다.

2. 남사할린 주당위원회(크류코프 동지)는 소련 각료회의 송환문제 전권대표(골리코프 동지)가 규정하는 기간에 송환 대상자들을 이후 본국 송환을 위해 379호 수용소(홉스크 항)로 집결시키도록 한다.

...

소련 각료회의 의장 스탈린  
소련 각료회의 총무국장 차다예프<sup>66)</sup>

63) ГАРФ, Ф.Р-9401. Оп. 1, Д. 2864, Л. 356.

64) ГАРФ, Ф.Р-9401. Оп. 2, Д. 148, Л. 339.

65) 위 글. 동일한 서신의 초안으로 여겨지는 Л. 400을 보면 내무부가 남사할린 내의 한인과 중국인들이 고국의 친지에게 편지 왕래하는 것과 송금까지도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최종본에서는 삭제되어 있다. ГАРФ, Ф.Р-9401. Оп. 2, Д. 148, Л. 400.

66) ГАРФ, Ф.Р-9526. Оп. 5, Д. 53, Л. 15. // Динн Ю.И.(2013), С. 77-78. 모두 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문서의 나머지 부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3조-해군부는 379호 수용소에서 한인을 수송할 선박을 준비할 것; 4조-남사할린에서 북한으로 도착하는 한인에 대한 면담은 북한군 민정행정국이 담당하며 이후 이들의 거주를 위해 북한 인민위원회에 인계

위 문서는 1947년 당시까지 소련이 사할린한인의 귀환을 원칙적으로 지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구체적 수행계획까지 사실상의 실무 협의가 종료된 상태로 실행만을 남겨두었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 실행계획서는 문서 위에 스탈린의 서명이 보이지 않다는 사실이 의미하듯 말 그대로 실행 계획으로만 남았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는 앞으로 규명해 나가야할 과제가 되겠으나 두드러진 점은 한인의 귀환지를 북한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떤 이유로 이제까지 ‘조선으로(в Корею)’라는 표현이 북송계획안으로 바뀌게 되었는지와 더불어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기록이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누구에 의해 생산되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한인 귀환에 관하여’의 생산 시점과 생산자에 대한 의문이다. 이 문제는 일본인 귀환 논의와의 연관성을 살피는데 의미가 있다. 문서 ‘한인 귀환에 관하여’와 연관 문서들을 살펴본 결과 이 의문은 쉽게 해소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명확한 근거는 없으나 이 문서의 생산자를 Ф.И. 골리코프(Голиков)<sup>67)</sup>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1947년 12월 3일에 골리코프는 외무장관인 몰로토프에게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보냈다.

정확한 자료에 의하면 남사할린에는 23,298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들은 일본인의 귀환 조치가 추진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고국 귀환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는 중입니다. 제 의견으로 제안을 드리자면 위에서 언급한 수의 한인들을 1948년 하반기 중에 북한으로 보내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와 남사할린 주당 대표, 극동군 25군(북한) 및 해군이 의견을 함께 하였습니다.<sup>68)</sup>

같은 달 27일자로 기재된 골리코프의 또다른 문서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위에서 밝힌 자신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각 담당자들 사이에 확인해 왔던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남사할린 주당 대표인 민정국장 크류코프는 ‘1948년 하반기 중에 한인을 귀환시키는 데 대해 올해 10월 29일에 동의를 표했고’, 극동연해주 군관구 부책임자(니콜라예프 Николаев)는 ‘11월 14일에 (1948년) 여름 동안에 한인들을 귀환시키고 이주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했으며, 운송 문제와 관련해 해군은 ‘1948년도에 완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협조 의지를 밝혔다는 것이다.<sup>69)</sup>

이상의 내용은 ‘한인 귀환에 관하여’가 군이 주도하던 귀환업무 담당 부서에서 12월 중순 이후에 작성되었음을 암시한다. 귀환 업무 담당자들인 군 관계자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한인의 귀환을 실현시키려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일본인 민간인의 귀환과 동일한 방식으로 (북한으로의) 한인 귀환을 실행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 준비 사항에 대한 언급은 몰로토프에게 소련 정부안으로 확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잘 진행되었으니 외교적으로 구체화할 것을 암시하는 의미로 읽힌다.

골리코프가 외무장관에게 군이 실무 부서간의 협의 및 동의사항을 상세히 언급한 이유는 순탄치 않았던 사할린으로부터의 일본 민간인 귀환 과정에 대한 불만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가 가장 먼저 크류코프로부터 이미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한 점이나, ‘한인 귀환에 관하여’ 제 2항에 어떤 경우에도 한인 귀환 대상자 집결 업무에 있어 자신의 지시를 남사할린 민정국장이 거부

된다; 5조-한인 귀환자의 모든 재산은 관세법에 따라 반출하도록 함. 이 문서는 1993년에 국내의 한 언론에 의해 소개되었고 연구자들 역시 이 기사에 의거하여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당초부터 내포된 오류들에 연유되어 잘못된 해석을 낳고 있기도 하다. 「사할린의 한인들, 한러 근대사 비사: 러시아문서보관위 사료 독점 발굴(34)」, 『동아일보』, 1993년 4월 20일.

67) Филипп Иванович Голиков(1900-1980) 2차대전에 참전한 소련 군인으로 주로 정보 계통에서 일하였으며 1943년부터 부국방장관으로 임명되어 독일군에게 잡힌 소련군 포로의 송환을 맡았다. 전후에 상장(우리의 중장에 해당) 계급으로 정보계통의 요직을 담당했고 1947년 당시에는 소련 각료회의에서 귀환 업무 담당자로 일했다. 1961년에는 군 최고 계급인 소연방 원수로 승진하였다.

68) ГАРФ, Ф.Р-9526. Оп. 5, Д. 53, Л. 13. // Дин Ю.И.(2013), С. 77.

69) ГАРФ, Ф.Р-9526. Оп. 4, Д. 54, Л. 416. // Дин Ю.И.(2013), С. 77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점도 그 방증이 될 수 있겠다. 하지만, 자신의 보고서를 다음과 같은 문구로 마무리하며 한인 노동력의 문제를 언급한 사실은 보다 결정적이다. “이는 옳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23,000명의 한인을 노동력으로 붙잡고 있다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요, 또한 그들을 북한으로 보내는 것은 극히 합당하기 때문입니다.”<sup>70)</sup>

폴리코프가 사할린한인의 귀환지로 북한을 지목한 것을 두고 오늘날의 관점에서 이를 사할린한인을 남한으로 귀환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하는 것은 계획의 입안 시기(1947년)뿐 아니라 시베리아 지역에서 붙잡힌 한인 포로들의 귀환이 북한을 통해 이루어졌던 1948년도 5월 이후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당시 남북의 분단이 공고하게 고착화되지 않았던 사실을 간과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여겨진다.<sup>71)</sup> 한인 포로 중에 500여명 이상의 남한 출신자들이 흥남과 육로를 거쳐 남한으로 귀환하였으며,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육로 이동의 여지는 1950년 초까지 존재했었다.<sup>72)</sup>

폴리코프의 한인 귀환 계획은 그 구체성과 더불어 중앙정부, 지역당국, 군 등 실무 주체 모두로부터 동의를 받는데 성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실행 계획으로 구체화되지 못하였다. 그 원인에 대해 연구자 진은 사할린 민정국장의 개별적 움직임이 최종적으로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군은 인도적, 대외정책적 관점에서 한인 민간인 귀환에 나섰고 이에 대해 중앙 당도 동조하는 입장이었으나 크류코프에게는 당장 투입 가능한 노동력 문제가 더 절실했으며, 이 같은 민정국장의 설득이 조용하지만 중앙 당국자들에게 합리적 주장으로서 동의를 넓혀가고 있었다는 것이다.<sup>73)</sup>

과연 크류코프는 조심스럽고 조용하게 움직였다. 1947년 11월 17-18일에 폴리코프는 소련 각료회의 국장(A. Гриценко)으로부터 사할린 주당에서 올린 보고서를 전해 받았다. 보고서는 ‘남사할린에는 계획에 따라 1948년도에 남사할린에서 귀환하게 될 일본인 112,480명과 한인 23,298명이 남아 있다’면서, 하지만 ‘1948년도 상반기에 이들 노동력이 모두 각 사업체를 떠나게 된다면 1948년 기간 중에 발효되기로 되어 있는 소련 각료회의의 3014호 결정이 효력을 발휘할 틈도 없이 현재 가동되는 공업시설들이 정지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사할린 주당위원회는 한인의 귀환을 1948년 말까지도 늦춰주시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내용이다.<sup>74)</sup>

이와 같이 크류코프는 군이 주도하는 민간인의 귀환을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지역 당국의 현실적 문제를 앞세워 이미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는 정책에 균열이 나타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단계에서 크류코프는 자신의 의도를 성취하지 못했다. 앞서 언급된 12월 27일자 몰로토프에 대한 보고서에서 폴리코프가 2만 3천명의 한인 노동력을 붙잡아 두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지 않다고 강력히 반박하고 나왔기 때문이다.

물론 폴리코프의 승리라고도 할 수 없었다. 1947년 중에 결의될 것으로 기대했던 ‘한인 귀환에 관하여’는 끝내 서명되지 않고 해를 넘기고 있었다. 폴리코프의 확고한 의지를 여러 차례 확인한 크류코프 역시 포기하지 않고 방향을 돌려 외무부를 설득했다. 1948년 1월 4일에 작성된 외무차관 Я.А.말릭이 ‘한인 귀환에 관하여’의 서명 당사자 중 한 사람인 각료회의 총무국장 Я.Е.차다예프(Чадаев)에게 전한 내용에 따르면 크류코프는 공업과 어업 분야에서의 극심한 노동력 문제 뿐 아니라 남북문제를 제기하고 나왔다. 차관의 발언은 다음과 같았다.

70) 원 글.

71) 뒤에서 언급되듯이 남북문제가 ‘한인의 귀환에 관하여’가 최종 결정되는데 결정적인 장애로 작용한 것은 추후의 일이었음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72) 폴리코프가 한인 운송과 관련하여 ‘한인의 귀환과 이주’(расселение:이주 혹은 이민)를 언급한 점이나 한인의 귀환 실행 시기를 1948년 7-10월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북한 노동자 모집 및 1948년 5월부터 시작된 한인 포로의 송환 문제가 연계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관련 자료를 섭렵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시베리아 포로의 귀환에 대해서는 국내 연구로 박민영의 연구(「소련군 포로가 된 시베리아지역 한인의 귀환」,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0집, 2003, 1-25면)가 있으나 러시아 문서는 전혀 활용되지 않아 소련측 정책의 구체적인 추진을 살펴보기 어렵다.

73) Дин Ю.И.(2013), С. 78-79.

74) ГАРФ, Ф.Р-9526. Оп. 5, Д. 53, Л. 13. // Дин Ю.И.(2013), С. 78. 문서에는 크류코프의 의견이 소련 각료회의에서 합당하다는 동의를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크류코프가 사할린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한인 일부가 자신들이 남한 출신임을 내세우며 남한으로의 귀환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근거할 때 ... 한인들 모두가 조선으로의 귀환을 희망한다고 결론 내려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료는 크류코프 동지에게도 없습니다. 남사할린에서의 강제적인 한인 이주는 적어도 일본인의 귀환이 종결되는 시점까지 만이라도 실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이상과 같은 이유로 외무부는 1948년도에 남사할린으로부터 한인의 대규모 귀환은 실행되어서 안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한인의 개인적인 청원은 그것대로 개별적인 차원에서 검토되고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sup>75)</sup>

이렇게 골리코프의 주장은 외무부와 각료회의 의장 스탈린의 지지를 잃게 되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사할린한인들의 귀환을 막으려 했던 크류코프의 시도는 성공을 거두었다.

사할린 주의 민정국장은 일본인 귀환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과정에서 한인 귀환 연장의 논리들을 보다 정교화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확하게는 일본인들의 귀환이 결과한 사할린 현지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이 1947년 말에서 다음 해 초에 이르는 일련의 시기 동안 그의 논리를 강화시켜 주었음에 분명하다. 또한 전후 처리를 둘러싸고 소련 정치권에서 암암리에 진행 중이던 군대와 민간 부문 사이의 묘한 긴장이 행정관리로 인식된 크류코프에게 유리한 국면을 제공해 준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군부보다 더 앞선의 대민업무 관련 최고지도자들의 마음을 돌리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지도자들의 구체적인 사전 준비와 의견 표명이 크류코프의 노동력 부족론으로 단방에 철회될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크류코프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때문에 사할린 주 행정 책임자는 한인 귀환의 기한 문제와 제한된 최소한의 동의를 확대하는 전술로 나갔다고 여겨진다. 즉 노동력의 부족을 강조하기보다 그는 현지 노동 현장의 총체적인 정지라는 최악의 사태만큼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체 한인을 당장에 귀환시키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판단을 이끌어냈던 것이다.

그러므로 소련이 사할린한인의 귀환 자체를 공식적으로 철회한 것은 아니었다. 임시 연기된 한인의 귀환은 크류코프의 언급처럼 어차피 곧 종료될 일본인 귀환의 완료 시점에 재개될 수 있을 것이다. 한인 귀환이라는 원칙만 아니라 그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의 변경도 없었고, 그것을 위한 어떠한 논의도 이후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바로 이 점이 골리코프로 하여금 크류코프의 한인 귀환 시점 연기론을 반박할 명분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기록문서들을 통해서는 이후 사할린한인 귀환 문제를 둘러싼 논의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 크류코프 등 민간 행정 관리들이 한인 귀환의 건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도 귀환 업무를 담당하는 소련군 지도자들조차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1948년 초 당시로서는, 골리코프 등 소련군 관계자들이 기대보다 많이 늦어지긴 했으나 일본 민간인의 귀환이 1949년 7월에야 일단 완료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본다면, 단정할 수 없으나 한인 귀환은 늦어도 1950년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될 수 있었다.

한인의 잔류를 일관되게 주장했던 크류코프 조차 조선인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사할린을 떠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던 듯 여겨진다. 사할린 현지의 사정들을 보여주는 기록들은 대체로 1950년 시기까지 현지 당국자들이 한인을 노동력 이용의 문제와 관련해서 주목하기보다는 안보문제나 현지에서의 소비에트 체제 안정화의 문제에 더욱 주목하고 있었음을 느끼게 한다.

심지어 한인의 노동력 활용을 탐색하는 문서에서도 이런 점이 확인된다. 가령 일제시대 남사할린 내 조선인 탄광 노역의 대표적 작업장인 나이부치(內淵) 탄광에 대한 조사 기록에는 ‘독신자 1500여명이 남아 있다’며 이들을 사할린우골<sup>76)</sup>이라는 새로운 생산 조직으로 편입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20-30명이 이와 빈대가 들끓는 30㎡ 남짓한 방에 개인 이불도 없이 생활하며, 이 기숙사에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어떤 체제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sup>77)</sup> 작업장의 규모나 산업 시설에 대한 중요도 면에서 타 작업장과

75) ГАРФ, Ф.Р-9526. Оп. 5, Д. 53, Л. 16.// Дин Ю.И.(2013), С. 79.

76) 우골은 러시아어로 석탄이라는 의미이다.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미가 컸던 탄광에서조차 한인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이 기록은 일제시대 강제노동 당시의 합숙소 생활이 더 열악한 상황 가운데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 초기 한인 사회가 처한 어려운 생활 형편을 엿보게 하는 것이다.

한인들의 곤란한 노동 현장의 상황은 1948년에도 그다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948.10.5. 소련공산당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당위원회 회의 의사록 29호에 언급된 한인 노동자의 경제형편에 관한 보고를 보면 ‘한인 노동자들의 경제 형편이 대단히 열악하여 배급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되어 있다.<sup>78)</sup> 사할린한인에 대한 간략한 보고서인 이 기록은 사할린 내 산업 현장 전반의 사정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소비에트 초기 현지의 당국자들이 한인의 노동력 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면 작업을 재개할 수 없을 정도의 열악한 작업장과 노동자들의 상황을 수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는 모습을 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개인들이 올린 ‘고국으로 놓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귀환 요청서’를 계속 받고 있던 지방 당국자는<sup>79)</sup> 강력하게 한인들을 노동 현장으로 복귀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도 어려웠고, 그렇다고 귀환까지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 사할린 주당국은 ‘이러한 현상은 현지의 당 조직이 (귀환문제에 대해) 작동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1947년 9월)까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상적 조건도 만들어지지 못한 까닭이다’고 자인했다.<sup>80)</sup>

#### IV. 나가며

1947년 7월 22일에 일본인의 귀환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남한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할린한인들을 귀환시킬 곳은 없었다. 6.25 동란이 시작될 것임을 사전에 알았던 군 지도자들이나 소련의 수뇌부는 새로운 결정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현실적으로나 인도적 측면에서도 한인 귀환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패는 없었다. 소련은 1950년 4월 22일에 사할린에 거주하던 일본인의 집단 귀국이 완료되었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동년 7월 1일까지 잔류를 결정한 모든 일본인, 그리고 한인은 거주지 등록을 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개인적 통제를 강화했다.<sup>81)</sup> 자신이 등록된 구역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사전 승인 없이 이동할 수 없게 되었고 직업을 갖지 않은 개인들에 대한 감시도 강화되었다.

임시거주자의 신분으로 줄곧 각종 제한과 차별 속에 있었던 한인들은 1952년 5월 6일 소련 각료회의 결의에 따라 소련 국적의 신청이 가능한 대상이 되었다.<sup>82)</sup> 이로써 소련은 사할린한인에 대한 정책을 귀환에서 정주로 변경한 셈이었다. 물론 소련 국적을 신청하는 경우도 드물었거니와 신청하는 경우에도 길게는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실을 기초한다면 시민권의 부여가 곧 정주 정책의 공식화라고 보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사실상 이 조치는 임시거주자 신분의 경계인이었던 한인을 열외자인 무국적자로 규정하는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설령 그것을 정주 정책의 공식화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1952년 시점에서 국적 부여의 목적을 현지 노동력 확보 및 유지에 대한 관심과 연결시키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더구나 소련은 1950년대 내내 사할린한인의 소련 국적 취득을 격려하기보다 북한 국적을 받도록 독려해 달라는 북한의 요청을 수용해 행정력을 동원하는 측면 지원도 마다하지 않았다.<sup>83)</sup> 노동력이 필요하여 외

77) ГИАСО, Ф.171, Оп.1, Д.31, Л. 42.

78) ГИАСО, Ф.44, Оп.1, Д.65, ЛЛ. 3~6.

79) ГИАСО, Ф.4, Оп.1, Д.344, Л. 70.

80) 같은 면.

81) ГИАСО, Ф.242, Оп.1, Д.21, Л. 84.

82) 실제 그 구체적인 지침은 1952년 5월 30일 2/417호에 의해 규정되었고, 사할린에서 앞의 지침을 구체화하는 처리 방안이 나온 것은 1952년 8월 8일이었다. ГИАСО, Ф.242, Оп.1, Д.33, ЛЛ. 13~14 참조.

83) 기록에 따르면 소련이 한인의 국적 취득을 위한 본격적인 조치를 취한 시기는 1958년으로 북한측의 제안을 받아 추진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ГАРФ, Ф.Р-9401. Оп. 1, Д. 4562, Л. 267-273을 참조하였다. 1958년 4월 당시에 생산된 이 일련

국 국적자를 정주시키는 정책이란 논리적으로 가능한 조합이 아니다.

1946년부터 5년 가량의 기간 동안 한인 귀환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사할린한인 귀환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소련의 주된 관심사는 새롭게 획득된 영토의 빠른 안정화에 대한 관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다고 여겨진다. 앞서 살폈듯이 이를 위해 소련은 전후 새로 획득된 영토에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적성 민족의 제거라는 원칙을 한인에게만은 예외로 적용했다.

물론 쟁점이 되는 한인 노동력 활용의 문제도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대부분 한반도 남부 출신 자들로 구성된 사할린한인 사회는 숙련된 농업기술자를 대거 포함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패전 전에 일본이 건설했던 공업 시설에서 부차적 지위이지만 전시 경제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었다. 지역 행정 담당자의 눈에도 공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스탈린 시기 소련의 경제발전 계획의 달성을 위해서 한인 노동력은 단지 2만 3천명이라는 수치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러시아인 이주자 뿐 아니라 북한 노동자 모집을 통해 수혈했던 어업 분야는 소위 선주민으로 불렸던 사할린한인들 중 소수만이 투입되었던 분야라는 점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귀환을 전제로 한 임시적 한인 노동력 유지는 1952년을 기점으로 변화하는 것도 사실이다. 1952년을 초에 일제 시기부터 많은 한인들이 일하던 개별 작업장에 대한 각종 생활 여건 개선 관련 문건들이 다수 나왔다는 사실이 이를 반영한다. 사할린우골 콤비나트 소속 한인 노동자의 생산 및 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조치(1952.1.9자)<sup>84</sup>), 글랴사할린레스쁘름 소속 한인 노동자의 노동 및 생활 상황 기록(1952.1.8)<sup>85</sup>), 글랴사할린봄쁘름 소속 한인 노동자의 생산 강화를 위한 조치들<sup>86</sup>), 수산업 종사 한인의 생활 및 문화적 여건(1952.1.7자) 등과 이와 관련된 각종 결정, 통계, 협조 요청 자료 등이 그것이다.<sup>87</sup> 이들 자료에서 언급되는 한인 중심의 작업장들에 대한 생산 여건과 생산성에 대한 평가는 몇 년 전의 탄광의 조선인 노동자를 언급한 기록에 비해 매우 엄격하고 비판적인 논조로 가득하며 당국이 본격적으로 한인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별도의 관리에 돌입하였음을 보여준다.<sup>88</sup> 뿐만 아니라 1952년 말에 이르면 사할린 내 언론에서 한인의 귀환 할당이나 귀환에 관한 여하한 모든 정보(의 공개)를 금지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위의 기록들은 이후로 계속적인 거주자로 관리 대상이 될 사할린한인에 대한 소련의 통제가 이동의 제한을 통한 안보의 확보와 한인 사회의 동요를 방지하는 차원을 넘어 본격적인 노동력 이용의 추구라는 목표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입장을 드러내는 기록 자료들에 기초할 때 해방 이후 5년여의 중요한 시기에 사할린한인의 역류를 노동력 활용의 문제를 부각시켜 설명하는 입장은 재고될 여지가 있다. 1952년에 두드러졌던 소련 당국의 입장 변화는 1946년-49년간의 일본인 귀환이 이미 완료된데 이어 1952년 4월 28일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됨으로써 사할린의 한인은 일본 국적자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던 상황과 연결지어 보다 상세히 살펴져야 할 문제인 것이다.

의 기록에서 눈에 띄는 구절은 ‘소련 내무부와 외무부, 안전국 등은 15년 이상 소련의 극동에 거주하는 15,000명 이상의 한인들이 국적이 없다는 점을 비정상적이라고 여기는 바이다’고 한 당국의 언급(ГАРФ, Ф.Р.9401. Оп. 1, Д. 4562, Л. 268)이다.

84) ГИАСО, Ф.53, Оп.7, Д.105, ЛЛ. 11~13.

85) 같은 곳, 14-18면.

86) 같은 곳, 19-23면.

87) 같은 곳, 27-34면.

88) 뿐만 아니라 ГИАСО, Ф.53, Оп.7, Д.181, ЛЛ. 1~5의 한인의 수와 관련된 각종 통계를 보면 1952년 이후부터 소련국적 취득자, 일본인 귀환시 포함된 일부 한인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되는 등 이전에 비해 사할린한인에 대한 훨씬 많은 정보들이 나타난다.

89) ГИАСО, Ф.131, Оп.1, Д.3, Л. 2. 한인의 귀환 관련 보도 통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지시서는 2급 비밀에서 해제된 기록으로 확인된다.



## <참고문헌>

ГАРФ(GARF: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Ф. 5446: Постановления Совета министров СССР
- Ф. 9526: Фонд управления Уполномоченного Совета министров СССР по делам репатриации

ГИАСО(GIASO: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архи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Ф. 53: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совет народных депутатов
- Ф. 171: Управления по гражданским делам

Крюков Д.Н. Граждан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на Южном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в 1945 - 1948 г г. // Краеведческий бюллетень, 1993. № 1. С. 3-44.

Бок Зи Коу. Корейцы на Сахалине. Южно-Сахалинск. 1993.

Дин Ю.И. Проблема репатриации корейцев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в 1945-1950 гг. // *Вопросы истории*. Вып. 8. - М., 2013, С.72-81.

Ким И.П. Политическое,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и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территорий, присоединенных к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Восточная Пруссия, Южный Сахалин,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1945 - первая половина 1949 года. Диссертация на соискание ученой степени кандидат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Южно-Сахалинск, 2010.

Ким И.П. Репатриация японцев с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в послевоенные годы // Вестник Росси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м. И. Канта. 2009. Вып. 12. С. 26-30.

Кузин А.Т. Исторические судьб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Монография. В трех книгах. К. 2. Интеграция и ассимиляция (1945 - 1990 г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здательство «Лукоморье», 2010.

\_\_\_\_\_. Исторические судьб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Монография. В трех книгах. К. 2. Интеграция и ассимиляция (1945 - 1990 г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здательство «Лукоморье», 2010. с. 72.

\_\_\_\_\_. Проблемы послевоенной репатриации японского 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а // *Россия и АТР*. 2010. № 2. С. 76 - 83.

Пак Сын Ы. Проблемы репатри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Материалы региональной научно - 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27 - 28 марта 2007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здательство Лукоморье, 2008. С. 277 - 287.

\_\_\_\_\_. Репатри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родину: история и проблемы // Режим доступа: <http://www.dvd-sakhalin.ru/?pg=2&type=2&page=0>

Пак Чон Хё.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и корейцы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 Уроки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Материалы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священной 65-летию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2 - 3 сентября 201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2011.

Подпечников В.Л. О репатриации япон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с территории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 *Вестник Сахалинского музея*. Южно-Сахалинск. 2003. № 10. С. 257-260.

강정하, 2001, 「사할린 잔류 한인의 영주귀국을 둘러싼 한-일-러 교섭과정 연구」, 한림대학교 국제기구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성중, 2009, 「사할린 한인동포 귀환의 정책의제화 과정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50.
- 방일권, 2012, 「한국과 러시아의 사할린한인 연구-연구사의 검토」, 『동북아역사논총』 38호, 363-413.
- 장석홍, 2007, 「사할린 지역 한인 귀환 : Repatriation of Koreans from Sakhalin, G-3 REPATRIATION 자료」, 『한국근현대사연구』 43집, 210-275.
- 최기영, 2012, 「한인의 사할린 강제 이주와 귀환」, 장석홍외, 『해방 전후 국제정세와 한인의 귀환』, 역사공간
- 한혜인, 2011, 「사할린 한인 귀환을 둘러싼 배제와 포섭의 정치」, 『사학연구』 102.
- 황선익, 2012, 「사할린지역 한인 귀환교섭과 억류」,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3.
- 
- 三田英彬, 1981, 『棄てられた四万三千人』 三一書房.
- 全國樺太連盟, 1978, 『樺太沿革・行政史』, 全國樺太連盟.
- 北海道新聞社, 1988, 『祖國へ』, 北海道新聞社出版部.
- 大沼保昭, 1992, 『サハリン棄民：戦後責任の点景』, 中公新書.